

오피니언

光日春秋

전용배



체육 및 스포츠분야에 종사하면서 평소 필자는 스포츠가 매력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력이 있음에도 좌절하는 경우는 다른 많은 영역에서는 흔하지 훈하다. 세상이 꼭 실력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정확한 자대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어떤 영역에 서든 주제에 편입되지 못한 ‘사파무립(邪派武林)’의 고수는 널려 있다. 그러나 적어도 스포츠 세계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다. 아무리 감독이나 코치가 선수를 편하해도, 실력이 있으면 벤치에 머물지 않는다. 관중석의 팬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경기력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는 오게 되어 있다.”

사실은 그렇다. 스포츠분야는 보편적 규칙 때문에, 적어도 경기는 공정한 자대가 적용된다면 믿고 있으며, 우열을 가리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화두가 정치 또는 선거에 이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6·2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누구를 찍어야 할지. 우리나라 선거에서, 공약을 찾아 비교분석하면서 누구의 공약이 기습에 와닿는지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공약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복종’과 ‘노

풍’만 강조한다면,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민들 눈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반반이다. 그렇다고

자의 역할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선출직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동네 앞마당이라도 쓸어본 경험, 즉 남을 위해 봉사와 희생해본 경험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남을 위해 삶의 일부분을 희생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느냐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문성은 비례대표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 말고, 어떤 요소가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해답은 대한민국 헌법에 제대로 녹아 있다.

누구를 찍을 것인가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누가 나온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선출해야 하는데, 후보 난립과 정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유권자는 험하게 표를 던져야 할지, 제도에 문제를 있는 것인지 누구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시지 않는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하던 유권자의 뜻으로 남겨 둘 수밖에.

혹자는 “선거란 결국 최선이 아니라 차선,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면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차악(次惡)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장에 간다면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 아무리 오심보보리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유권

집권여당이나 기존 시·도지사를 심판해야 할 목적이라면, 그 당시 또는 기존 시·도지사 집권 시, 이전 집권세력이나 시·도지사 때와 비교하여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개인 및 집단의 인권이 성장했는지, 경제발전 지표가 우수한지,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는지, 이념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는지, 복지가 나아졌는지, 교육 및 의료서비스가 진일보했는지,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었는지, 과거보다 행복해졌는지 등, 대한민국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 가치를 준거의 틀로 적용한다면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정권이든 또는 시·도지사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항상 공과 과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단지 이전에 비해 이러한

기준에서 10개 중 6~7개 정도의 영역에서 발전과 개선이 있었다면 다시 찍어줘도 무방하다. 그러나 5개 미만이라면 심판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에서 같이 근무 중인 외국인 교수들이 가끔 의아해 하곤 한다. 미국의 경우 기득권층과 비즈니스맨들은 대부분 공화당 쪽이고 흑인들 및 지식인층은 대부분 민주당 쪽인데 반해 한국은 자기 정체성과 상관없이 투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투자가 보기엔 그것은 민주주의의 역사와 성숙도의 문제이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죽기 직전에 “아직도 수천 명의 사회학자 중에서 공화당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말인가?”라고 말했다는 우스개가 있다.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회학자가 공화당원이 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유권자의 정체성은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후보의 정책보다 이미지에 의존하여 투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선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인 때문이다.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헌법에 내재된 가치를 떠올리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다.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인구 부풀린 ‘도시계획’ 부작용만 키운다

광주시와 전남도내 각 시·군이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설정해 도시기반시설과 택지개발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광주시와 광양·순천·여수시 등 전국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조사 결과, “모든 자치체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인구를 실제인구보다 최대 64%까지 초과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199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목표인구 220만명으로 설정해 기존 59km, 8km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각각 77km, 9km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 말 현재 광주시의 인구는 144만5828명에 불과한 데 비해 주거지역은 73km, 상업지역은 9km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거 및 상업지역의 확대는 과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아파트 미분양과 빙집, 상가 미임대 속출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시·군의 ‘목표인구 과대 설정’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다. 지난 1999년과 1998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광양시와 순천시는 2016년 목표인구를 각각 43만명, 50만명으로 설정했으나 2008년 말 인구는 각각 14만1000명, 26만9000명에 머물고 있다.

각 자치체들이 이처럼 ‘목표인구’에 매달리는 것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인구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를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복지나 환경 등 다양한 도시 수요를 지표에 포함하고 상향식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체는 소탈대실의 우를 키우고, 정부 역시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이자부담 눈덩이’ 서민 금융지원 확대해야

부부업체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광주·전남 서민들은 1인당 평균 230만 원을 벌려 연간 이자로 94만8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은행권 대출 평균금리(7%)의 6배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이자부담에 허리가 훨지경인 반면 대부업체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 대부업체가 올린 순이익은 310억원에 달했다.

서민들이 힘들어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대부업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준 금리 인상설이 재기되면서 서민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금리 상한선을 낮추고 저금리 대출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기대에 걸리지 못했다. 서민계에 대한 정부 보증을 늘려 낮은 금리의 자금을 벌려 쓸 수 있는 물꼬를 터 놓아야 한다. 저리의 생활자금과 전세자금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서민정책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제1금융권과 똑같은 견전성 기준을 적용하는 한 신용대출이 확대될리 만무하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 역시 까다로운 대출조건으로 돈 빌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상당창구를 찾은 서민들 가운데 고작 2% 정도만 돈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사설상 대출이 막혀 있다. 서민가계가 자녀를 둘기 위한 학자금 대출도 이자 감면 혜택이 사실상 없다. 연 이자율이 5.7%에 이르는 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서민가계에 대한 정부 보증을 늘려 낮은 금리의 자금을 벌려 쓸 수 있는 물꼬를 터 놓아야 한다. 저리의 생활자금과 전세자금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서민정책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無等鼓

고대 로마의 정복자 유틀리우스 카이사르는 미리 승부를 결정 짓은 다음에 전투에 임했다고 한다. 그는 일부러 그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소수의 정예군단을 움직였다. 많은 병력보다는 정예군단이 신속하게 이동해 고지를 점령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고대의 지상전은 높은 곳을 먼저 차지해 낮은 곳의 적을 상대하는 쪽이 이기기之道이었다.

역사평론가 시오노

나나미는 저서 ‘로마

인 이야기’에서 ‘카이

사르가 언제나 이길

곳을 찾아내고 상대방

이 곳에 며무르게

하는 병법을 구사했

다.’라고 적고 있다.

미리 짜인 ‘전투 구도

(Frame)’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는 얘기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구도를 잘 잡아

야 이긴다. 선거구도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력은 70% 라고 한다. 나머지 30%

는 공약과 후보 자질, 운이 작용할 때가

많다.

역대 대통령선거가 그 예다. 1987년

노태우 후보는 ‘4자 합동’의 고지를 선

점했다. 1997년 김대중 후보의 승부처는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의 결합이었다. ‘선거 프레임’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4·16총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가, 한나라당 지지층을 대거 투표장으로 이끄는 역효과를 냈다. 최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일부

후보가 민주당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무시하고, 전·현직 시장을 ‘구태’로 몰며 ‘물갈이’를 외치다가 좌절했다.

6·2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복종’과 ‘노동’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전안함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

의식을 자극하는 여당과, ‘무능한 정권

을 심판하자’라는 야당의 대결이다.

선거가 북풍 프레임에 갇히면 여당이 이기고, 안보공세에 놀란 애당 지지자들이 일어서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모든 것은 민심에 달렸다. 불과 6일 남았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論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 저자·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 사 회 2 부 2200-692 | 경 영 지 원 국 2200-511 | 문 화 흥 보 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 (F A X 227-0118)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면 접 부 2200-672 | 문화생활부 2200-661 | 광고마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651

정 치 부 2200-634 | 여론분석부 2200-679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 체 육 팀 2200-663 | 디자인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5 | <F A X 02-773-9335>

사 회 1 부 2200-612 | 사 진 부 2200-691 | <F A X 222-4267> | 조 친 부 2200-571 |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강요를 준수합니다

건강에 좋고 농촌도 살리는 ‘떡 소비’ 많이 했으면

요즘 우리 떡은 소포장으로 간편하게 만들어져 걸어다니며 먹을 수도 있고 간편 포장으로 나와 인기가 높다. 그런데 우리 전통 떡이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이걸 대체적으로

떡을 많이 먹으면 개인의 건강에도 좋고, 요즘 땅값이 떨어져 힘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도 되니 국민들이 떡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해주었으면 좋겠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